

2014 연례 정세 전망

통 일 연 구 원

Online Series CO 13-25

1. 북한 내부 정세

2014년에는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친정체제의 공고화가 북한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장성택의 처형은 북한판 ‘문민화’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북한군부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인해 발생한 결과이다. 김정은 스스로 친정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며, 장성택 측근들에 대한 추가 숙청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4월 개최 예정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그리고 대대적인 인사조치의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의 당·내각 및 군에 대한 친정체제 구축 시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특히 장성택의 처형으로 김정은에 의한 공안기구의 일원적 지휘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인사와 정책에 대한 군의 영향력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 군, 공안기구 간 견제와 균형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며, 김정은이 이를 조정하는데 실패할 경우 군의 역할강화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의 초래 가능성도 있다.

2014년에 북한당국은 ‘새로운 경제관리방법’과 국가경제개발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지만 장성택 처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경제·무역 분야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사회적 공포 분위기로 인해 비공식 경제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

비효율적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와 비생산적 전시성 사업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 가능성도 높다. 장성택 판결문에 나온 경험 조건의 재조정을 추진할 경우 북·중경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 부문에서는 김정은의 통치능력과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상화 및 교양선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공고화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2014년에는 2012년 학제 개정에 따른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는 바, 김정은 이상화 과목을 개설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할 것이다. 국경 통제, 외부영상물 반입 등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통제 또한 한층 강화할 것이다.

신군부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신·구세력 간 권력배분 및 이권 조정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북한내부 불안정을 막기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대와 한국정부의 단호한 대응태세에 따라 도발은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군사력의 전진배치나 신형무기의 공개 등 저·중강도 군사도발의 가능성이 높으며 사이버공격, 테러 등 주체가 불분명한 공격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형태의 대남 위협 및 긴장고조 정책을 지속하면서 우리 사회내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 민간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유화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전술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대남관련 선제적 제의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은 핵보유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주장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외자유치 노력을 병행하는 등 핵무력 경제건설 병진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성택 처형으로 경제건설보다는 핵무력건설로 정책의 추가 기울 가능성이 있다.

2. 북한의 대외관계

2014년 동북아 정세는 중국의 공세적 외교 강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 일본 아베정권의 우경화 지속에 따른 한·일 간 및 중·일 간 갈등 심화 등 상황이 더욱 복잡해 질 것이다. 장성택 처형으로 인한 북한의 불확실성 증대, 북한 정권의 핵보유 고수 정책 등으로 북한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이 크게 악화되었다.

미국은 북한정세 변화가 미칠 영향을 평가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다.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없는 한 북한의 대미 정책은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국은 북한정세 안정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대남 도발 억제, 4차 핵실험 방지 등을 촉구하면서 북한 체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교류와 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요구를 일정 수준 수용할 것이나 이 과정에서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일관계는 납치문제의 해결 추진을 매개로 대북 접촉과 교섭을 시도하더라도 아베정권의 보수화 정책으로 인해 진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나진-하산철도 연결 및

나진항 사업 등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3. 남북관계

장성택 처형 이후 대규모 숙청과 인사개편 등 내부요인이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군부 우선의 선군정치가 다시 강조되면서 북한은 당·정·군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단행하고 대내 통합과 안정을 위해서 남북관계의 긴장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더욱 강한 공세를 취할 것이며, 2014년 초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구실로 대남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김정은 정권과 북한 군부에게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은 위기 조성이나 협박의 수단으로서 항상 열려 있는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북한이 2014년 상반기 중 장거리미사일 추가 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준비할 경우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박근혜정부에 대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전가(轉嫁)하면서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고 대화 공세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관계에서 기존의 적대적인 입장을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정은 권력과 북한 내부의 잠재적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속됨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교착국면을 벗어나 '정상화'를 향한 본격적인 관계 개선의 상태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을 매개로 한 실무수준의 당국 간 대화가 재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공단 운영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북공동 위 및 분과위의 가동을 위한 접촉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특별한 돌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남북 당국 간에도 본격적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은 제한된 범위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문화 분야도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KINU 2013